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계획(안)

2019. 6.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목 차



I. 추진배경	1
II.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사회적 가치	2
III. 국내·외 로컬푸드 추진 현황	5
IV.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비전 및 목표	7
V.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3개년 계획	8
1.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확산	8
2. 중소가족농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14
3. 소비자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역먹거리	19
VI. 추진체계 및 일정	24

I. 추진배경

-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글로벌화·규모화·단작화에 집중한 '산업화된 현대 농식품체계'는 복합적인 외부 위기요인에 취약한 한계 노출
 - 지나친 효율성의 추구로 인한 부가가치의 집중도 심화는 산업의 탄력성(지속가능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부정적 파급효과 유발
 - * “고도의 집중화된 상태는 외부효과에 의한 저항력을 낮춰 오히려 높은 수준의 위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탄력성’과의 균형 필요”(Roger L.Martin, 2019)
- 국내 농산물 유통·소비체계도 가락시장으로 대표되는 도매시장, 대형마트,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 등 주요 채널 중심으로 거래 집중
 - 높은 가격변동성 등 비효율적 유통구조가 심화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 부족, 중소농을 중심으로 판로부족 현상 등 문제점 발생
- 이에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순환하는 지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찾고자 하는 변화의 움직임 등장
 - 미국(파머스마켓), 일본(지산지소) 등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중소농들이 지역사회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우리나라도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16.1.14 발효)에 따라 공공급식에 국산 또는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권리를 획득하는 등 기반 확보
 - * 공공급식은 내국민대우 원칙(수입산·국내산을 차별할 수 없음)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지역단위 로컬푸드 유통·소비체계는 농식품의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확장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

➡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미래 장기 비전과 추진 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현 정부내('20~'22) 중점 실행계획 마련

Ⅱ.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사회적 가치

1.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정의 및 범위

□ 로컬푸드(Local Food)란,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

○ ‘지역’의 범위는 국가와 사람마다 다르게 규정하나, 행정구역인 시(市)·군(郡)이나 도(道)의 경계 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말함

〈 로컬푸드에 대한 공간적 범위 해외사례 〉

○ 국토규모, 사회·문화적 배경, 행정구역 체계 등에 따라 정의되는 공간적 범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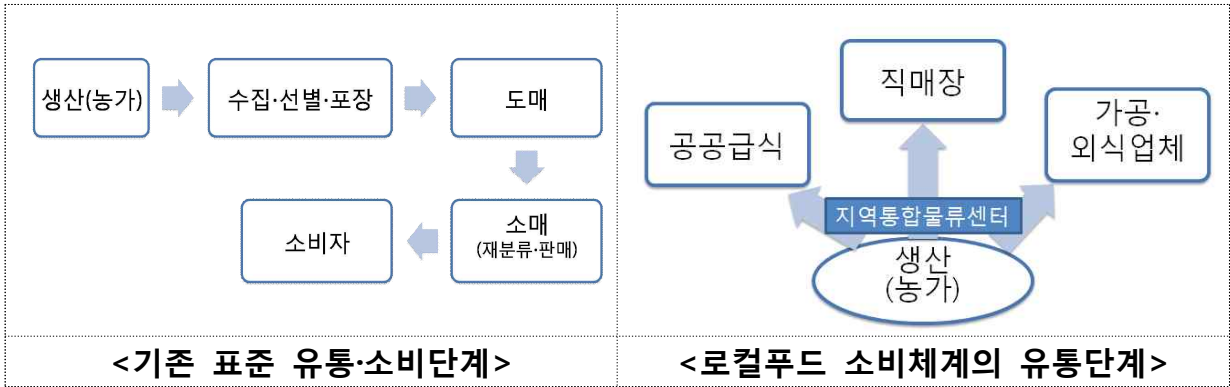
국가	문헌 또는 단체	공간적 범위
영국	National Association of Farmer's Market	반경 48km 이내
	London Farmer's Market	외곽순환도로에서 160km 이내
미국	Fresh and local food in the USA	400km 이내 또는 차로 하루내 갈수 있는 거리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반경 160km 이내
	2008 Farm Act	생산지에서 640km 이내 생산된 주(州)내

○ 다만, ‘지역’의 범위를 물리적 거리에만 근거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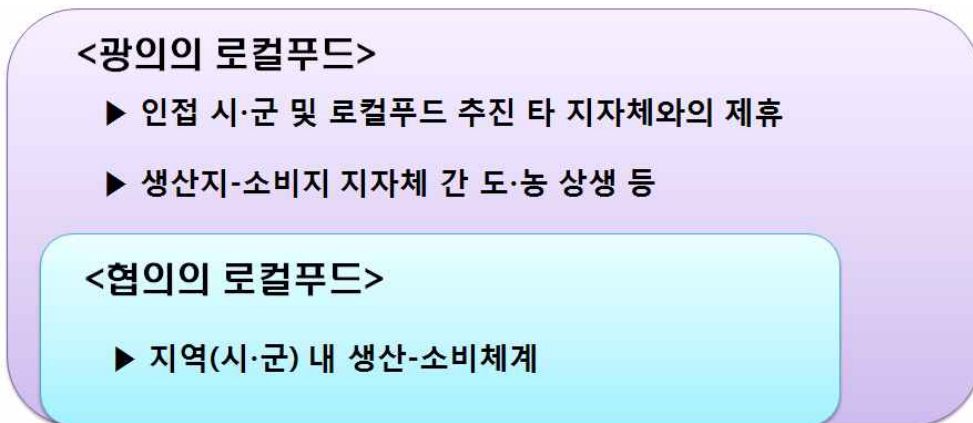
□ 로컬푸드 소비체계란, 하나의 지역단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유통-소비 시스템

○ 지역의 중소농들이 생산한 농식품을 조직화하여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외식업체 등 지역 내 주요 수요처로 순환

○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농축산물 이동거리를 최대한 단축시킴으로써 신선도를 높이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효용 제고



- 대형화·상업화 된 글로벌 농업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민간이나 지자체 등에서 주도하는 먹거리 관련 사회운동이자 경제적 활동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 대량생산·유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소비 관계에서 먹거리의 사회·경제·문화·생태적 의미를 되살리자는 사회적경제활동의 일환
-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핵심 요소는 ①중소농 중심의 지역 생산주체 및 ②생산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출처가 명확한' 농식품
 - 지역 외부에서 소비되거나, 지역 외 주체와의 연계를 통해 가공·유통되는 경우도 원재료의 지역성 및 원재료 생산자와의 신뢰관계가 확보된다면 광의의 로컬푸드 소비체계에 포함 가능



2.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사회적 가치

- (신뢰도 제고) 이동거리가 짧아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 당일수확, 당일공급을 통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신선한 상태의 먹거리를 적기에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
 - * '생산지 수확 → 소비자' 유통 기간 : (로컬푸드) 평균 0.5~1일, (일반유통) 평균 3~6일
 - 언제, 어디서, 누가 생산한 농산물인지 확인이 가능한 '얼굴 있는 먹거리' 이기에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생산 가능
- (중소농 소득 안정) 경작규모가 작은 중소농들에게 고정적인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가격 교섭력을 높임으로써 안정적 소득 확보
 - 거래 교섭력이 약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농들도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고, 유통경로가 단축되어 농가 수취가격은 향상
 - 소량·비규격 상품도 판매 가능하게 되면서 상품화율이 높아져 농가 소득 증가 및 농경지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기여
- (지역사회 기여)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영농 실현 및 지역사회 내 신뢰 형성
 - * 지역승수효과(완주) 비교(동국대, 2014) : 대형마트(1.08) vs. 로컬푸드직매장(2.52)
 - 지역 내 먹거리 소비를 통한 자본 축적, 먹거리 관련 일자리 창출, 지역민 교류 활성화 등을 견인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게 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실현이 가능하고, 푸드 마일리지* 감소 등으로 환경 보호
 - * 먹을거리가 생산자 손을 떠나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거리(수송거리(km)×수송량(t))
- (유통의 효율화) 서울·수도권 등 중앙에 집적 후 지역으로 재유통 하는 비효율성을 낮추고, 생산자가 주체가 되는 효율적 유통경로 창출

Ⅲ. 국내·외 로컬푸드 추진현황

1. 해외 로컬푸드 추진 현황

- (미국) 2009년부터 농무부에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자(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라는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시행
 - 연방정부 차원에서 로컬푸드 정책포털을 개설하고, 관련 부서·정책*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 등의 시범사업 추진
 - * 9개국의 27개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을 로컬푸드 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 지원
 - ** 지역의 식재료(과일·채소)를 납품받는 학교 및 지역 공동체에 기술 및 보조금 지원
 - 주 및 지방정부에서는 민·관 합동 먹거리정책 위원회(FPC)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인증 및 농민 직접 마케팅 지원 정책 등 자체 추진

<사례> 미국 코네티컷주(州) 하트포드시

-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푸드정책에 대한 민·관 협의를 추진하고, ‘Hartford Food System’이라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로컬푸드 운동을 집중 확산
- 버려진 땅을 활용하여 유기농으로 지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65여개 농민장터 설립 및 지역 농산물을 버스에 싣고 순회하는 Mobile Market 운영

- (일본) 2000년대 들어 ‘지산지소(地產地消)’운동을 중점 추진하여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및 시정촌(기초지자체)별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 * 전체 도도부현(100%) 및 시정촌의 85%가량이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 계획을 책정·시행
 - 직매장(전국 약 23천여개)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 접점을 확대하는데서 나아가 식(食)교육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 지역 생산자-급식센터-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산지소 코디네이터를 파견·육성 등의 사업 실시
 - * 일본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이용 현황 및 목표 : ('12)25.1 → ('17)26.4 → ('20)30% 이상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판매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관광·외식업체와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접점 다양화

2. 국내 로컬푸드 추진 현황

- 전북 완주에서 '08년 '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로컬푸드 실현을 내세우며 마을·공동체 육성사업과 맞물려 추진
 - 정책 대상을 유형화·분리하고 가족소농 및 고령농 중심으로 기획 생산 기반을 지원, 민·관 협치로 지역 내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 '12년 전국 1호로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직매장(12개소) 및 레스토랑(4개소)·꾸러미·학교급식에까지 공급 경로 확대
 - * ('17년) 586억원 매출 달성, 3천여명의 관련 일자리 창출(고용 659명, 참여농가 2,526명)
- 농식품부에서는 그간 유통구조 개선 및 효율화의 한 방안으로 직매장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 사용 활성화 정책·사업을 실시('13~)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운영('15~)
 - 로컬푸드 직매장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로컬푸드 본연의 가치 실현·확산은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
 - * 로컬푸드 직매장(개소/평균매출) : ('13)32개소/9.9억원 → ('16)148/17.3 → ('18)229/19
 - 중소농 중심의 생산자(단체)의 조직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로컬푸드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 정책의 내실화가 다소 부족
- '17년부터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국정과제 등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포함·추진
 - 먹거리 선순환체계 TF를 통해 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나주 등)을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성과 창출에 집중
 - 지자체장 공약에도 다수 포함되는 등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현재 45여개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추진 중

⇒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지자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자발적 추진 동력 부여 필요



IV.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비전 및 목표

비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대국민 인지도 : ('19) 49.4% → ('22) 70% ◆ 로컬푸드 유통 비중 : ('18) 4.2 → ('20) 8 → ('2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까지 공공기관·군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중 70% 달성 - '22년까지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참여 지자체 100개 * 로컬푸드 성공모델 지자체 10개 육성, 7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공공부문 선도모델 구축 ⇒ 학교·민간시설로 확산 ◆ (주체) 정부가 선도지역 중심 마중물 역할 ⇒ 민간(사회적경제조직 등) 중심으로 전국 확산
추진 과제	<p>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②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③ 대국민 로컬푸드 인식 제고
	<p>② 중소가족농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해 월급받는 농업인 육성 ② 로컬푸드 기반 가공산업 활성화 ③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
	<p>③ 소비자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역 먹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②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먹거리 확대 ③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IV.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3개년 계획

1.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

1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참여의 장(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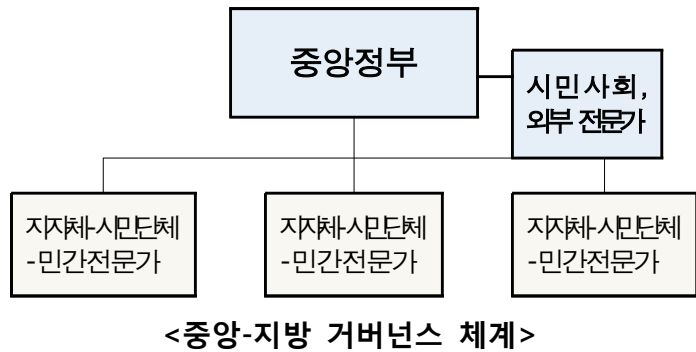
- 로컬푸드를 주제로 주요 시민단체들과 로컬푸드 소비체계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담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논의 확장
 - 난상토론, 사례 발표·견학 등을 통해 시민단체별로 각기 지향하는 목표와 로컬푸드의 다양한 가치(환경, 복지, 안전성 등) 간의 접점 발굴
 - * (예시) 환경-푸드마일리지 감축, 복지-취약계층 건강한 먹거리 공급, 안전성-얼굴있는 먹거리 등
- 시민단체별로 로컬푸드와 연관된 특색 있는 컨셉을 정립하여 회원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로컬푸드 소비운동을 추진토록 교육·활동비 지원
 - * 정기 포럼, 간담회 개최, 온·오프라인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단체별 연20회 내외)
 - 시민단체별 보유 매체(소식지 등) 및 관련 분야 전문 언론을 통해 노출
 - 권역('20:4개)별 '시민사회 먹거리 페스티벌' 실시로 상호 벤치마킹·확산
- 평생교육기관·시민대학 등과 연계하여 일반인 대상 교양과정을 개설 (연 400명)하고, 먹거리 활동 관련 시민전문가 양성(연 40명, '20~)



- * 로컬푸드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로컬푸드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49.4%에 불과
 - 기타 '생산자 직거래(16.1%)', '현지 음식(10.2%)', '지역 특산물(9.1%)' 순으로 인지

2 지역별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별로 계획 수립단계 부터 실행·보완단계까지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운영 지원 (연 20개소, '20~)



- 민·관 합동 주기적인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차기 정책 반영
- 지역 간 연계·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거버넌스도 동시에 운영하고, 우수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

<사례> '먹거리위원회'를 통한 민·관 협치

- (대전 유성구 먹거리위원회) 로컬푸드위원회 구성('14.10월) → 먹거리위원회로 확대·개편('18.12월)
 - 4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지역 먹거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정책 수립·추진
 - 생협 출신의 인력을 전문직으로 채용(별도 인사관리), 민·관을 잇는 코디네이터 역할 부여

- 시민활동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과정(푸드플랜 아카데미)을 운영*('19~)하여 민·관의 협업역량 강화
 - * 지자체 및 급식센터 담당자, 시민활동가 등 4인 1조(20개 지역)로 6주간 심화 교육·토론 실시
 - 지역별 여건·수요에 맞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컨설팅 병행 실시

3 다양한 형태의 신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 우수모델 사례 공모전을 매년('19~) 개최하여 민간의 다양한 로컬푸드 모델·단체를 발굴하고 경영 컨설팅·대국민 홍보 등 지원

구 분	사업모델 발굴		푸드플랜 역량강화
	우수 활동사례	신규 사업모델	민간활동지원
주제	현재 운영중인 먹거리 관련 활동사례	먹거리 관련 계획수립 또는 준비단계 사례	푸드플랜(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민간활동
대상	푸드플랜 실행조직,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 관련 사업 추진시 지원 대상에 사회적경제조직*도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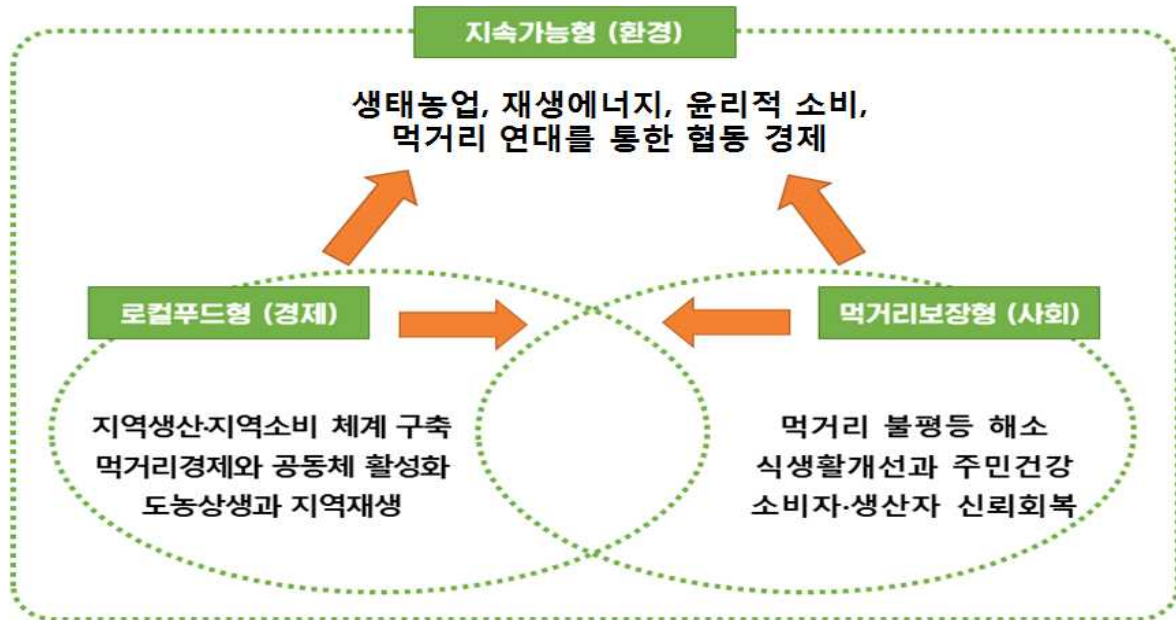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 농장 등

2

체계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① (계획)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및 시행**을 지원('22년까지 100개 지자체)
 - 먹거리 심층 실태조사*, 정책과제 도출, 맞춤형 먹거리 공급체계 개발 등을 위한 연구비용 지원 및 민·관 교육 병행 실시
 - * ① 농가별 품목·생산규모·인증현황, ② 유통업체 현황·취급량·품목, ③ 급식, 직매장, 소매점, 마트, 가공·외식 분포현황 및 취급량 등 조사
- 지역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푸드플랜 표준 모델** 마련·보급('19.5~)
 - 지역 내의 먹거리의 주요한 역할과 지향점에 따라 **로컬푸드형, 먹거리보장형, 지속가능형(종합형)**으로 유형화



- 로컬푸드형 푸드플랜의 경우, 지역의 인구구성 및 산업적 특성에 따라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으로 나누어 모델 구축이 가능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① 지역 내 선순환을 바탕으로 한 도-농 공급협약 모델(공급형), ② 군소 시·군 수요통합 모델	지역 내 생산-소비 균형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지역 내 선순환을 바탕으로 한 도농 공급협약 모델(수요형)

* 농촌형과 도시형 지자체가 연계된 '지역협력형', '광역형' 모델 구축 가능

② [예산] 먹거리 계획 협약을 통한 패키지 예산 지원

- 정부·지자체간 먹거리계획 협약을 통해 필요로 하는 농림사업(14개)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연계사업(20여개) 가점 부여
- 중소농 조직화 및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H/W 및 운영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19년: 7개 사업 →'20년: 14개 사업으로 확대)
- *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또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춘 지자체 대상

'19년부터 지원(7개 사업)	'20년부터 추가 지원 사업(5)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신활력플러스)	⑧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②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③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 APC) 지원	⑩ 향토산업육성*
④ 직매장 설치 지원	⑪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⑤ 저온유통체계구축	⑫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
⑥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⑬ 직거래장터 지원
⑦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⑭ 직거래교육·홍보 지원

* 해당사업은 '20년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획협약에 포함,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

- 먹거리계획 협약 체결 및 패키지 예산 지원 대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 FD(Family Doctor, 전담 자문단)를 파견하여 일대일 현장 자문 지원
- * 지원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운영 자문, 지원사업 성과관리,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 등

③ [제도·조직] 가격지표 마련 및 실행조직·제도 기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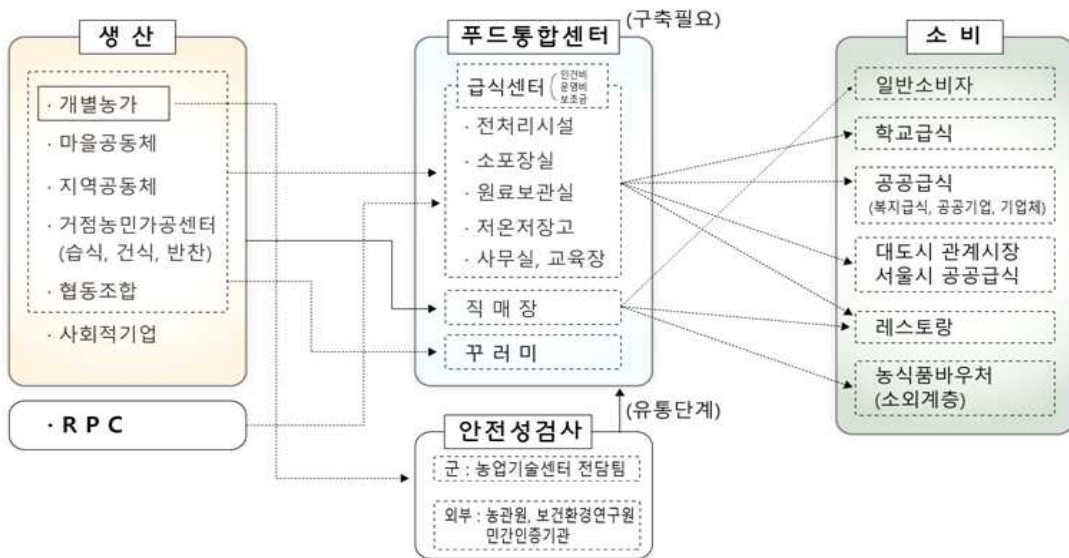
- 로컬푸드 유통경로에 대한 가격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도매시장 경매가격 외에 대안유통경로의 준거가격 마련
- (직매장)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거래가격을 수집·분석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가격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20)
- (공공급식 등 기타경로) 공공급식 제공 단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조사방법 및 표준 매뉴얼 등을 설계('19)하여 적용('20~)
-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독려('19.6월:26개→'22:100개), 전국으로 확산하여 지방 정부의 체계적인 재정지원 근거 확보
- * 공공기관 급식 로컬푸드 우선구매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표준조례안 마련·배포('18.9월)

- 지역에서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중심 조직((가칭)푸드 통합지원센터)을 지정·운영하도록 **종합운영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21~)
 - * 농가관리, 물류관리, 행정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OS)
- 실행 조직에서는 농가를 조직화하여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능과 안전성·인증관리, 거버넌스 운영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담당
- 운영 형태는 민간위탁(행정설치), 출연기관(재단법인) 설립 방식, 행정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 가능

구분	민간위탁(행정설치)	출연기관(재단법인)	행정직영
운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에서 센터를 설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 행정 인건비 등 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재단법인 설립 ■ 민간협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부서형태로 직영 ■ 민간 협력 운영

< 참고 : 지역 생산-소비체계 모식도(예시) >

□ 중간 실행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체계 연결·구축



정부	지역 실행조직(지자체)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드플랜 수립 지원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공급망 구축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HW, SW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생산체계 구축 -안전·품질 관리 -먹거리 관련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마을·지역공동체 활성화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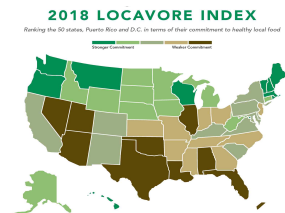
3 대국민 로컬푸드 인식 제고

1 [가칭]로컬푸드 지수 측정·발표

- 미국사례(로커보어(locavore) 지수)를 벤치마킹하여 로컬푸드 추진실적 등을 지표화하고 지자체별로 '(가칭)로컬푸드 지수' 매년 측정·발표
 - 초기('19)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20년부터는 민간 자율적 모니터링으로 추진·언론 공표함으로써 대국민 관심 환기

<사례> 美 로커보어(locavore) 지수

- 美 비영리법인(Strolling of the Heifers)에서 2012년부터 직거래실적 등 7개 지표를 합산하여 주(州)별 '로커보어 지수'를 매년 측정·발표함으로써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노력을 추적·장려
 - * 2012년 시작 이후 버몬트 주가 지속적으로 1위



2 로컬푸드를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 제작

-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로컬푸드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은 로고송·포스터·CI 등 핵심 콘텐츠를 제작·배포('19)
 -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매스컴(라디오 등) 등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로컬푸드의 대표 메시지를 전파



[국내·외 로컬푸드 홍보 포스터]

3 '로컬푸드 서포터즈' 활동 지원

- 일반 소비자들이 중심이 된 로컬푸드 서포터즈(로컬프렌즈)를 결성하여 온라인·SNS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팸투어 등 병행 추진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홍보 콘텐츠로 활용
 - * “로컬푸드는 00이다” 한줄평, 로컬푸드 체험기, 로컬푸드 활용 요리대전 등
- 로컬푸드 충성고객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조직화하여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 맞춤 홍보

2. 중소가족농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1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해 월급 받는 농업인 육성

① 중소농가 중심의 농가 조직화·교육 실시

- 지역별로 농가조직화 및 상품공급을 총괄할 수 있는 중간 실행조직을 중심으로 중소가족농 위주의 농가 조직화 추진

* (1순위) 영세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겸업농 등 소면적 농가

→ (2순위) 가족소농 차원의 생산이 어려운 품목(시설원예작물 등) 전문 농가

<완주군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대상과 형태>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조직화 대상	·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 - 0.5ha 미만 농가(1차)	· 장기적으로 1ha 미만 농가 참여 - 상업농과 초기 단계 분리 대응
조직화 형태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생산거점 공동체	·농업회사법인 (쥬완주로컬푸드, 용진농협 등) 영농조합법인 건강한 밥상, 두레농장 등

- 기획생산 운영매뉴얼('19.2월 배포) 등을 참고하여 품목별 농가대표 조직을 육성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농가조직화 모델·사례 주기적 공유
- 로컬푸드 주 공급자 확보를 위해 읍·면별 지역리더 대상 순회교육, 마을별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기적 신규 농가 발굴로 품목 다변화
-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영농지도 등을 실시하고, 발작물공동경영체·사회적 농업 등과 연계하여 마을단위·품목단위 생산조직화

② 로컬푸드 연중 기획생산 매뉴얼 구축

- 다품목 소량생산을 통한 연중 생산 작부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역 농산물 생산현황 및 역량 등을 심층 조사한 뒤 보완방안 마련
- 지역 내 마을별·품목별 농산물 재배현황을 분석하여 연중 생산 데이터를 구축한 뒤, 수요에 맞춰 생산계획을 세우고 작부체계 개편
- * 소비자 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품목 가지 수: 150~200가지 → 중장기적으로 **300여 품목**↑

- 지역별 주체 조직이 연중 계획에 따라 품목별 생산, 출하, 상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농가 수준에 맞춰 개발·보급
 - * 곡류, 과실류, 채소류(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양념류 등), 특용작물로 구분·분석
- 연중 생산·공급을 위해 필요시 생산자 작목반 등에 소규모 비닐 하우스·비가림시설 등 생산기반 구축 지원

③ 광역단위 로컬푸드 생산단지 연계

- 지역 공급이 어렵거나 생산·공급에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비효율적인 농산물은 광역 내에서 재휴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다품목 생산이 가능한 공동체 육성 및 품목별 광역 단위의 생산단지 조성*, 인근 시·군 간 품목교류 등의 연계·공급 방안 수립
 - * (예시) 광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한 충남의 경우 지역별 부족품목 보완 등을 위한 광역센터 검토

2 로컬푸드 가공산업 활성화

① 공동체 기반 가공산업 활성화

- 농민들의 가공 창업 촉진을 위한 인큐베이터로써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공동제조가공시설(농진청, '19.6월 86개소)
 - 로컬푸드 소비체계 활성화 단계에 따라 초기에는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를 활용하고, 추후 거점 가공센터를 신규 건립
- 농식품 가공·판매에 필요한 법·제도, 마케팅, 창업절차 등을 교육 하는 로컬푸드 가공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문가 코칭 지원
 -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관련 서류 대행, 품질·디자인 컨설팅 연계, 식품제조 관련 규정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담 매니저 채용 지원
 - 로컬푸드 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소규모 HACCP 시설 및 균일한 상품성 유지를 위한 기술 등 지원

완주 사례를 통해 본 로컬푸드 가공산업 육성방향

◆ <유형 1> 개별농민 직접가공 → 농민가공기업(공동체) 운영

-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공동가공센터 등에서 손수 가공
 - * 로컬푸드가공센터(고산·구이)를 지자체(완주군)에서 직영으로 운영, 다품목 소량생산
- 공동 디자인 개발·사용, 공동 용기 구매·사용, 통합 배송 등 공동체회사 운영을 통해 제반비용 절감 및 최소 판매단가 형성

◆ <유형 2>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기업) 개발 → 농가 계약재배로 원료 확보

- ‘원료 차별화 마케팅’이 가능한 프리미엄 가공식품(지역 원료, 무첨가) 개발
 - * 완주 “진짜 두유” : 국내산 특허콩을 첨가물 없이 껍질째 사용, 저온 살균방식으로 영양소 손실 최소화
- 다수의 중소농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 제고 및 안정적 원료 확보
- 지역 내(로컬)시장 뿐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의 일반시장으로 진출·확대

2 지역농산물 활용 식품 가공 활성화

- 마을 공동체 회사 등 기존 정부지원으로 조성된 공동체 단위의 가공시설 운영 활성화방안 마련
-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 사업자’ 제도 운영 및 인센티브 마련
 - * 총 유통·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시·군·구)을 50%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농산물직거래법)
-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신제품 개발, 원료 차별화가 가능한 신선편의 밀키트(Meal Kit)* 등의 제품개발을 위한 소규모 R&D 추진
 - * 소분 및 세척까지 손질이 다된 재료 등이 하나의 패키지로 포장되어 있는 간편 식재료

3 로컬푸드 기반 가공식품 판로 확대

- 정부·공공기관의 MICE 행사시 다과 및 기념품 등에 로컬푸드 기반 가공식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 * 정부·공공기관 MICE산업 식·음료비 총 지출액('16) : 약 6,257억원 (MICE산업 전체의 19.1%)
- 지역 농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가공식품의 판로(시장) 확대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실시

진출 시장	맞춤형 지원 방안
<1단계> - 지역 내(로컬)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급식 지원 조례 확산('18:14개→'19:30개) 및 푸드플랜 패키지 예산 지원('19:7개 사업→'20:12개) 등을 통해 소비시장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시
<2단계> - 수도권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 표시제,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인증 등을 통해 상품 경쟁력 확보 도·농 상생 공공급식(예:서울시), MICE 산업 등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소비기반 구축
<3단계> - 수출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증·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수출시장 진출 확장성을 가진 지역 강소식품기업(Hidden Champion) 발굴·육성

3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

① 사전 안전성·품질관리 지원

- 로컬푸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PLS 등 적용되는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 생산 예방
 - 환경친화적 농자재 보급 등 생산공급관행 개선을 위한 지도·컨설팅
-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통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확대(농관원 협조)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를 사전 차단
 - * 로컬푸드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 건수(농관원) : ('18) 2,012건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19:26개소) 확대
-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 비용 및 가공식품의 경우 자가품질 검사·유통기한 설정 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토양 화학성·농업용수 수질 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 자체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20년)
 - 농협식품연구원(농산물), 한국식품연구원(가공식품)을 활용하여 시중 유통 전 상시적인 안전성 분석을 측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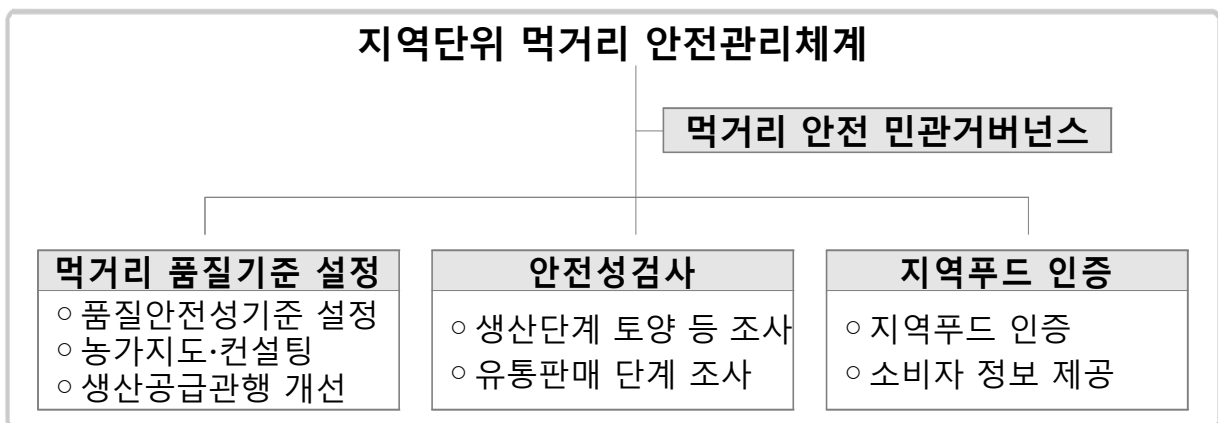
②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상호신뢰관계 구축

- 지역 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소비자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고 지자체 및 식품 위생·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단 구성
 - 주기적으로 로컬푸드 공급 농가, 업체 등을 방문하여 재배·생산 현황 및 출하과정 전반을 모니터링 실시
- ‘로컬푸드 소식지’를 발간하여 납품 농가들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체험·참여형 행사 및 교육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관계 형성
 - * (사례) 김포로컬푸드직매장 : 매년 40여차례의 생산자방문·수확 체험 등의 소비자 참여 행사 실시



③ 정부 및 지자체 인증제도 참여 유도

- 지자체별로 지역농업 상황에 맞춰 자체적으로 품질·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원
 - * (예) 완주로컬푸드 인증 기준 : (농산물) GAP 수준의 잔류농약허용기준+무제초제,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
-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인증(축산물 HACCP, GAP, 친환경 등) 취득시 공공급식 납품 등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 인증제 참여 유도



3. 소비자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역 먹거리

1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급식 로컬푸드 비중 확대

○ 나주 혁신도시 모델*을 기초로 전체 혁신도시(10개)로 확산하여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급식 로컬푸드 비중 제고('18:41%→'22:70%)

- 혁신도시별로 로컬푸드 공급역량(생산기반, 관련시설 및 제도 등)을 점검한 뒤, 역량이 높게 나타난 곳부터 순차적으로 확산

* ('19) 전주·완주, 원주 → ('20) 김천, 진주 → ('21) 부산, 제주, 음성 → ('22) 대구, 울산

※ (사례) 나주 혁신도시 모델 구축 과정 및 성과

· 선도지자체(완주) 공무원 등 전문가 4인이 상주하여 농가교육 조직화, 현장 컨설팅, 추진 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수요 확보에 주력한 결과, 로컬푸드 공급 업무협약 체결('18.11)
⇒ 나주 혁신도시 내 10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지역농산물 시범 공급체계 구축

○ 지자체, 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추진단」을 운영('19~)하여 현장 지원 및 컨설팅

- 지역 내 공공기관과 로컬푸드 유통조직 간 식재료 공급협약 체결 및 공공기관 로컬푸드 구매지원 전산시스템* 보급

* 수발주, 정산, 정보 공유 등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학교급식통합관리시스템 활용)

② 군(軍)급식 로컬푸드 확대

○ 경기·강원권 접경지역(15개 시·군) 및 장성·논산 등 시범지역 군(軍)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18:약 30% →'22:70%)

- 국방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군 급식 관련 협정서(국방부-농협)에 지역농산물 구매 의무 비율 반영('19.7)

- 군급식에 지역 중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 위주로 공급되도록 단지장제도* 폐지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일정 수수료(3~6%)를 받고 농가관리, 납품농산물 수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유통체계

- 농협에서 공급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 내 공공급식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추진
- 군 장병의 급식 선호도 및 식재료 소비 현황 분석에 기반한 공급전략 마련
 - 군부대 수요에 맞춰 반가공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설 연계 지원 및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보급
 - 대한영양사협회와 연계하여 레시피 개발·보급 및 조리병 대상 조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19~)

③ 공공부문 성과분석 및 전파

- 소득증대, 유통비용 절감 등 공공급식 시장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효과를 실증 분석('19.12)함으로써 타 급식 분야로 로컬푸드 체계 전파

※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규모(총 7.1조원 내외)

- 공공기관(0.07조원), 군대(1.2), 학교(3.2), 유치원·어린이집(0.8), 국공립병원(0.15), 사회복지시설(0.98), 경찰·교정시설(0.1), 고령자 공동급식(0.65) 등
- ('19) 공공기관, 군급식 중심 선도모델 구축 → ('20) 공공기관, 군, 학교 확대 → ('21~'22)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국공립병원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산

④ 농산물 수집·분산을 위한 물류체계 구축

- 다품목 소량 생산된 농산물들을 효율적으로 수집·분산하기 위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통합적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 농산물의 선별 및 소포장, 저온저장 등을 위한 공동 물류시설 운영
 - 순회수집 차량 운영을 통해 중소·고령농의 운송부담 경감
 -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애로사항 : 직접운송(30.2%), 재고처리(27.9%), 출하작업(20.9%)
- 점차 위축되고 있는 지방 도매시장을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종합 물류시설 또는 지원센터 등으로 재편하여 활용
 - 기능 전환 희망 지방 도매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1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학생건강증진 5개년 기본계획(19~23)*」을 바탕으로 학교급식 관계자가 로컬푸드 취지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영양(교)사 대상 교육·홍보**
 - * 학교급식에 지역농식품 소비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교육부·농식품부 협조)
 -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급식용 레시피 개발·보급, 요리전문가 시연 등
- 시범지역(경북(광역형), 안동(기초형))에 로컬푸드 공급모델을 우선 구축하고(19.10월~) 이를 **매뉴얼화**하여 타 지자체로 확대·전파(20~)
 - 학교급식 식단, 식재료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 및 전산 코드**를 개발·보급(20~)함으로써 확산 기반 마련
- 필요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농산물 구매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등 **수요자의 추가부담 없는 공급체계** 구축
 - *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학교) 불편 최소화
- **식생활 체험·교육과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가치 및 장점 등을 알림으로써 지역 농산물에 기초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

2 사회복지시설 등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관계기관(보건복지부)과 협조하여 복지기관 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2)**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내 평가항목에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추가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표준 식단(안)**을 월별로 배포, 활용토록 하고 지역별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사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 서울시 내 10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10개)를 1:1로 연결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직거래로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 차액 지원(1인 1식당 500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수발주시스템 구축

- 노인 도시락배달(지자체), 결식아동지원(지자체), 영양플러스 사업(보건소)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시에도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지침 반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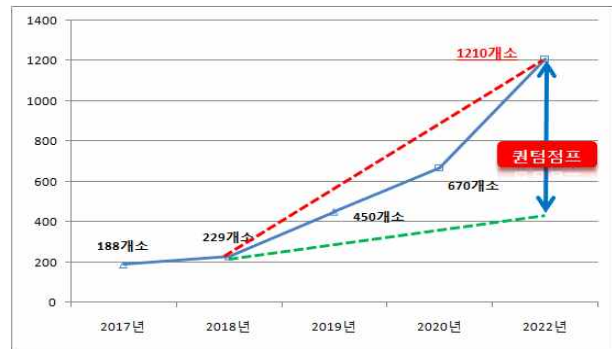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1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으로 소비자 점점 확대

- 농협과 협력하여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를 로컬푸드 판매 거점으로 삼고, '22년까지 1200여개의 로컬푸드 판매장 구축('18:229개 → '22:1,210)

- 독립매장·숍인숍(shop in shop) 형태 외에도 농협은행 영업점 및 관공서 유희공간 등에 무인 직매장*을 확대 도입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농촌지역 직매장 운영 농협에서 농산물을 공급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계획(농협 협조)>

- 단순 양적 확대 뿐 아니라 개설 전 컨설팅부터 경영안정화까지 단계별로 면밀한 설계·운영을 지원하여 내실화 도모

* (준비) 농기조직화 컨설팅 지원 → (개설) 매장설치·홍보 → (안정화) 경영 프로그램, 네트워크 지원

2 로컬푸드 직매장의 기능 다양화

- 로컬푸드 직매장에 레스토랑, 로컬요리교실, 먹거리 교육·문화시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추가

- 단순히 지역농산물의 판매처에서 나아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한 '로컬푸드 식문화' 공유·확산의 중요한 거점
-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취·창업 준비나 시민 간 모임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개방·제공해줌으로써 복합 시민교류 공간으로 활용



▪ 직매장 외에 레스토랑 (행복정거장), 영농기공·체험장, 농촌정보센터 등을 갖춘 복합공간

<완주-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 싱싱밥상(로컬푸드 식당), 요리교실 실습장, 교육장 등을 두고 팜투어 등을 병행하여 로컬푸드 문화확산

<세종-싱싱문화관>

3 도시형 도·농 상생 복합문화센터 건립

- 서울 등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가칭)도·농상생 먹거리 교육문화 센터'를 구축하고 농촌지역과 1:1 교류를 통해 체험기회 제공
 - 신선·안전한 지역 농산물의 생산·공급 기반이 부족한 특·광역시에 1개소씩 건립하여 먹거리 관련 교육·문화·체험* 제공
 - * 교류 농촌지역 팜투어, 지역텃밭 및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산지밥상 등
- 로컬푸드를 활용한 공동식사·급식 제공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전달체제로 활용하는 등의 지역기여 프로그램 발굴

4 지역 외식업과의 연계·상생

- 지역 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는 지역 내 외식업소를 '로컬푸드 사용 지정업소'로 등록·확대하여 소비자와의 점점 다각화
 - 농가맛집(농진청), 지역 우수음식점(지자체) 등 기존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적극 홍보하고, 점차 일반 음식점들의 참여 유도

※ (사례) 충청남도 로컬푸드 사용 외식업체 인증제도 - '미더유'
▪ 주재료의 60% 이상을 지역농산물로 사용하는 외식업체를 인증(미더유)함으로써 외식업체의 지역농산물 사용을 장려
- '18년까지 39개소의 외식업체 인증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공간 일부를 임대하여 이동 가능한 소형 무인매대*를 설치, 지역 농산물 사용 가공제품 등을 판매
 - * 소비자가 모니터를 통해 제품 정보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후 즉시 구매·결제 가능
 - 유희공간을 공유하고, 발생 수익을 매장과 나눔으로써 지역 농산물 사용 가공제품의 매출 향상 및 소상공인의 부가수익 창출

VI. 추진체계 및 일정

과제	세부 정책과제	일정	추진 주체
민·관 거버넌스	로컬푸드 가치에 대한 교육·체험·홍보 실시	'19~	농식품부, 시민사회
	지역별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9~	각 지자체, 시민사회
	시민전문가 양성 및 로컬푸드 교양과정 개설·운영	'20~	농식품부
	지자체·시민사회 소통강화 교육과정 운영	'19.4~	농식품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19.5~	농식품부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시행	'19.1~	농식품부, 각 지자체
	농림사업 패키지 예산 지원	'19.3~	농식품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확산	'19~	농식품부, 각 지자체
	로컬푸드 유통경로에 대한 가격지표 마련	'20	농식품부
	로컬푸드 실행조직 종합운영시스템 개발·보급	'20	농식품부
로컬푸드 인식제고	로컬푸드 지수 측정·발표	'19.12~	농식품부, 시민사회
	로컬푸드 핵심 콘텐츠 제작·배포	'19~	농식품부
	로컬푸드 서포터즈 활동 지원	'19.1~	농식품부
중소농가 조직화	지역별 농가조직화·교육	'20~	각 지자체, 시민사회
	로컬푸드 연중 기획생산 매뉴얼 구축	'20~	각 지자체
	연중 다품목 공급에 필요한 생산기반 구축·연계	'20~	농식품부, 각 지자체
로컬푸드 가공산업 활성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19~	농촌진흥청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 제도 운영	'20~	농식품부

과제	세부 정책과제	일정	추진 주체
	로컬푸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소규모 R&D	'21~	농식품부
	정부·공공기관 MICE 행사 활용 판로 확대	'20~	농식품부
안전성· 품질관리	로컬푸드 납품 농가 안전성 관리 교육	'19~	농식품부, 각 지자체
	사전 안전성 검사 확대	'20~	농식품부 (농관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확대	'20~	농진청
	안전성·품질관리 분석 비용 지원	'20~	농식품부 (농협)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20~	농식품부, 각 지자체
	지역별 자체적 안전성 기준 마련·인증	'21~	각 지자체
공공급식 등 소비기반 확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 로컬푸드 공급확대	'19~	농식품부, 혁신도시 지자체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 비중 확대	'19~	농식품부, 국방부, 농협
	공공부문 로컬푸드 공급 성과 분석	'19.12	농식품부
	통합적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 지방도매시장 기능 재편 등 포함	'20~	농식품부, 각 지자체
학교급식, 취약계층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모델 구축·전파	'19~	농식품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공급체계 마련	'21~	각 지자체
	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및 표준식단(안) 마련	'22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협조)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시 로컬푸드 공급	'22	각 지자체
소비자 접점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20~	농식품부,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 복합·다양화	'20~	농식품부, 각 지자체
	도시형 도·농 상생 복합문화센터 건립	'21~	농식품부
	외식업체 지역농산물 활용 확대	'20~	농식품부, 각 지자체